

# 권영세 “尹 하야, 고려되지 않아… 옳은 방법 아냐”

##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헌재, 탄핵 심판 절차 공정해야”  
“계엄 분명히 잘못·과도한 조치”  
“해제 표결, 국회 있었어도 불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론에 앞서 하야 등의 거취 결정을 내릴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찬성·반대파가 충돌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를 별개로 해도, 하야했을 경우 이런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하야를 포

함한 부분은 대통령 본인의 중대 결심이지, 변호인단이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건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분명히 잘못했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가 됐을 경우에도 각 헌법 기관에 보내는 건 맞다”면서도 “국회에 보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주고 있는 만큼 국회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표결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장에 있었다고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한동훈 대표가 저와 똑같은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

시 당 대표였던 분이 ‘충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 이리면서 1년 뒤에 출당시켰다”면서 “그래서 박 대통령과 우리 당의 관계가 단절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심하지 않겠나”라며 “기각됐을 때도, 인용됐을 때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50% 가까운 분들이 지금 여전히 (헌재) 신뢰하는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장원이나 곽준근 같은 경우는 증언의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이라든지 대질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조기 대선 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 당에 대해서 지나치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들어올 의사가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든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환길씨에 대해선 “노사모 출신이었던 분이 우파 쪽으로 전향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민주, 광주 ‘尹 탄핵 반대’ 집회 “법적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지난 주말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한 보수 성향 단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극우 사이버 세력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들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 의해 광주시민 수백명이 학살당한 곳에서, 광주시민과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뺑뺑방 집회를 가졌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도 (당) 법률위원회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두환 세력에 이어 윤석열 세력, 뭐가 다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광주까지 가서 극우 집회를 가진 것에 개탄과 함께 강력히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각기 열린 바 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도시에서 계엄을 옹호한 극우 집회는 주력이 광주시민이 아닌 외지인 집회, 뺑뺑방 버스 동원 집회”라며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도 각각 “금남로에서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건 45년 전 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행위”,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라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 등록

선관위, 18~19일 신청 접수  
오는 3월5일 지역 86곳 선출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18일부터 19일까지 이를 간 진행되는다.

17일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광주 35곳, 전남 51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직·간선제로 선출하는 선거가 3월5일 치러진다.

금고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23일 확정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인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이하는 중선제로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총 35개 금고에서 32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선거를 치른다. 전남은 총 51개 금고에서 28곳은 직선제로 나머지 23곳은 대의원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오지현 기자



민주 ‘명태군 게이트 철저히 수사’ 촉구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 등 참석자들이 명태군 리스트 철저히 수사 등을 촉구하며 연립수

## 이재명, ‘우클릭’ 與 공세에 “민주당은 경제 정당”

상속세법 개정 등 연일 정책 이슈화  
“증세 막자는 것… 변하지 않으면 바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제중심 정책에 대해 ‘우클릭’이라고 비판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중심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업계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이어 상속세법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연일 경제 정책 이슈화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IT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예로 들며, “집값은 오르

는데 (조세) 기준은 유지하니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 셈이 됐다”며 “소득은 늘지 않는데 증세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니 고치는 것 아닌가.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한다느니, 자주 변한다느니 비판한다”며 “세상이 바뀌는데 당연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바뀌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바보라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현재 각 5억원에서 8억원과 10억원으로 각각 증액

하는 민주당 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억원까지 면세. 수도권외 대다수 증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와 성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니 성장률이 1%대로 추락을 해도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집권을 생각하지 않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이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국민의힘보다는 분명히 낫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뿐 아니라 안보도 민주당이다.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의 국방비와 진보 정권·민주당 정권이 집권했을 때 국방비를 비교하면 명확하다”며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다 민주당 정권 때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李, 김부겸과 24일 만찬 회동… 통합 행보 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는 등 야권 통합 행보를 이어간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배석자 없이 가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3일 친문재인(친문)계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국회에서 만나 90분간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통 크게 통합해서 민

주주의를 지켜내자”며 내란 극복에 찬성하는 야권 세력을 규합하는 이른바 헌정 수호 연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김 전 총리뿐 아니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과의 만남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선욱 기자